

제10권 26호

2020. 12. 21~2021. 1. 3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논단 | 3기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제언 |
| 이슈분석 | 최근 가계부채의 특성과 향후 과제 |
| 금융경영브리프 | 코로나 이후 글로벌은행의 수익성
디지털위안화, 달러 패권 탈피 신호탄 되나 |
| 금융시장모니터 | 금 리: 외국인 주도의 장세 지속 불가피
외 환: 2021년 외화자금시장 수급 개선 기대 |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연구위원 곽영훈(yhkwak)
연구원 최희재(heejaechoi)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위원 안성학(shahn)
연구원 조재범(bum123123)
수석연구원 이화정(hj_lee89)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수석연구원 김수정(sjkim1771)
외 환 | 연구원 윤지선(jisun.yun)

금융지표

연구원 최제민(jeminchoi)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3기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제언
- 06 **이슈분석** 최근 가계부채의 특성과 향후 과제
- 10 **금융경영브리프** 코로나 이후 글로벌은행의 수익성
디지털위안화, 달러 패권 탈피 신호탄 되나
- 14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외국인 주도의 장세 지속 불가피
외 환: 2021년 외화자금시장 수급 개선 기대
- 18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3기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제언*

황 규 완 연구위원(gwhwang@hanafn.com)

서울 집값 안정과 주택 수요 분산을 위해 3기 신도시가 건설될 예정이다. 다른 신도시처럼 3기 신도시도 자족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나 모도시인 서울과 거리가 가까운 곳에 위치하다보니 베드타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수도권 신도시 중 자족기능이 확충된 곳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계획은 있었지만 기업유치에 실패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3기 신도시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단계에서 민간기업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법·제도 정비를 통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 주택수요 분산과 자족기능 확충이라는 딜레마

일반적으로 도시는 인간이 모여 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반면 ‘신도시’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계획된 도시를 말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수도권 주변의 ‘분당’, ‘일산’ 등과 같은 도시 뿐만 아니라 과거 조선이 건국되고 새 도읍으로 선정된 ‘한양’ 등도 신도시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목적을 위해 신도시가 계획, 건설되어왔지만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세워진 신도시들은 대부분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수요 및 인구의 분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목적으로 건립된 신도시들은 대부분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목적달성을 위해 기반시설의 확충보다는 택지조성 및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립이 우선시되다 보니 베드타운이 되어버린 것이다. 정부 등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1995년부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자족기능용지’를 도입, 도시의 자족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지는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 신도시 건립 목적과 자족기능 확충이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라는 데에 있다. 일반적으로 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구규모, 모도시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떨어진 거리, 직주근접, 자족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지이용 계획 등이 필수적이다. 이 중 모도시와의 일정 거리 이상의 이격을 우리나라 수도권 신도시에서 확보하

수도권 신도시는
서울 주택수요
분산이 우선시되면서
대부분 베드타운으로
전락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기는 쉽지 않다. 집값안정을 위해 계획된 신도시는 우선적으로 주택건설을 통한 수요 분산에 주력하게 되고 수요 분산을 위해서는 모도시인 서울의 인프라를 신도시에서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어필해야 하기 때문이다.

∴ 자족기능 부족한 신도시 건설의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져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으로
교통망 확충,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 증가

이 같은 딜레마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신도시 계획 발표에 이어지는 광역교통망 확충계획이다. 계획의 핵심은 서울 도심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느냐이다. 이는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데에는 유효하지만 신도시가 독자적인 경제 기반을 갖추는 데에는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결과 서울 통근인구는 계속 증가하면서 광역교통망의 부담 가중, 추가적인 교통망 확충과 같은 지속적인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주민들이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자동차 통행량 증가로 인한 연료비와 같은 직접비용 뿐 아니라 교통 혼잡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 증가 및 환경오염 등의 간접비용을 종합한 우리나라의 교통 혼잡 비용은 2017년 기준으로 59.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기존 교통망에 가해지는 부담 역시 증가하면서 기존 주민들의 불편도 함께 늘어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신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은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다. 신도시 거주민의 대다수가 해당 도시 내에서 출퇴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도 출퇴근 인원수를 살펴보면 2010년 일일 평균 109.6만명이 서울 방면으로 이동했으나, 2016년에는 126.1만명으로 20% 가량 증가하는 등 자족기능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늘어만 가고 있다.

∴ 기업유치에 성공한 몇몇 신도시만이 자족기능 확보

서울에서 가까우면
모도시인 서울에
경제적으로 종속되고,
서울에서 멀면
소비자의 외면으로
도시개발 자체가 지연

1기 신도시를 예로 들면 서울 중심에서 20km 떨어진 곳에 대부분 위치해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 정도 거리에 위치한 신도시들은 대부분 베드타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니나 다를까 90년대 완성된 1기 신도시 중에서 비교적 자족기능을 확보했다고 평가 받는 지역은 분당 신도시 정도다. 일산은 비교적 고소득 일자리가 존재하지만 그 수가 적어 자족하는데 충분치 않고 평촌, 부천, 산본 등은 개발된 지 30년이 가까운 지금도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충분치 못하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보다 먼 거리에 계획된 2기 신도시들은 어떨까? 2기 신도시들은 서울 중심에서 대략 30km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었으며 관련 연구를 감안하면 물리적으로는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기 신도시 중 자족도시로 성장했다고 평가받는 도시는 판교, 광교신도시 정도에 불과하다. 파주와 김포 신도시는 여전히 상당부분 미개발지로 남겨져 있으며 검단 신도시도 구획지정 이후 10여년 간 개발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모도시인 서울 접근성이 떨어져 소비자들에게 어필하지 못하면서 주택수요 분산이라는 기본적인 역할조차 수행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성공한 신도시들은 모두 기업 유치에 성공한 공통점이 있다. 대기업이 이전함으로써 양질의 고용을 다수 창출해 독립된 경제기반을 갖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분당 신도시는 네이버, KT, 두산 등의 대기업 본사가 이전해 있으며 판교는 테크노밸리가, 일산에는 MBC, EBS 등 다수의 방송국이 자리 잡았다. 이들 도시들은 기업 유치를 위해 취득세, 재산세 인하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상당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입주한 기업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기획단계에서부터 일정한 컨셉을 부여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했다.

❧ 과거 ‘공모형 PF사업’의 실패는 훌륭한 반면교사

물론, 다른 도시들에서도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신도시 중심부에 대규모 복합시설을 건립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공모형 PF사업’으로 불리는 신도시 복합시설 건립계획은 대부분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원인이기는 했지만 금융위기가 아니었더라도 성공하기 힘든 계획이었다. 과도한 업무시설 비중, 높은 토지가격, 대기업 특혜 시비로 인한 공공기관의 조율실패 등 다양한 문제점도 산재해 있었기 때문이다.

‘공모형 PF사업’은 LH공사 등 공기업과 건설사 등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대규모 복합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당시 공기업은 효율성 개선을 강하게 요구받았기 때문에 민간과의 협력이 중요했고 민간은 공공이 주도하는 안정적인 사업구조에 주목했다. 더구나 건설사 등은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의 참여가 강조되었다. 공공과 민간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공모형 PF사업’은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명분이 우선시되는

1, 2기 신도시 중 자족도시로 평가받는 도시는 모두 대기업 유치에 성공한 공통점 존재

과거에도 ‘공모형 PF 사업’ 같은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금융위기 등으로 좌초

공공기관과 수익이 중시되는 민간 사이의 간극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결국 복합개발 계획이 수립되었던 부지는 모두 분할되어 사업 참여자 등에 매각되었다. 그리고 금융위기의 충격이 사라짐에 따라 대규모 쇼핑센터, 오피스텔 등으로 개발되면서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상당수의 수도권 신도시는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

❖ 도시계획 단계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3기 신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대규모 자족기능용지
조성할 예정

이처럼 다른 도시의 사례를 보면 3기 신도시는 베드타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 서울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워 경제적으로 종속이 불가피하다. 급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신도시인 관계로 서울에서 최대한 가까운 지역을 선정하다보니 나타난 현상이다. 물론 이에 대응하기 위해 3기 신도시에 525만㎡ 규모의 자족기능용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1, 2기 신도시의 사례를 보면 자족기능용지가 구획되었다고 해서 자족기능이 확충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 유치에 실패하면서 장기간 방치된 자족기능용지들은 대형 쇼핑센터와 같은 편의시설로 개발되거나 주거수요 흡수를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이라는 애매한 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신도시에서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다른 도시에 판매하는 기반을 갖지 못하면서 베드타운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유치 등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

반복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기업 유치 활동이 절실하다.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은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허브-스포크형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관련 협력업체들이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 자리 잡게 되어 전반적인 지역의 고용 및 경제적 기반과 같은 자생력이 개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기업과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기업이 원하는 입지, 용지 규모, 도시계획 시설 등을 우선 파악하여 해당 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 ‘공모형 PF사업’을 돌이켜보면 자족기능 확충에만 집중한 나머지 실제 이 시설에 입주해야 할 기업들의 입장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되었다. 결국 실제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업무시설 등이 과대하게 기획되면서 사업성 저하로 이어졌다.

❖ 신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여건마련도 중요

또한, 신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기업과의 연계를 특혜로 몰아세우는 사회적 인식도 지양되어야 한다. 과거 ‘공모형 PF사업’의 사례를 돌이켜 보면 공기업과 건설사의 연계로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대기업 건설사에 대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국정감사 등의 피감기관인 공기업은 이러한 여론에 밀려 토지를 높은 가격에 사는 기업에게 더 높은 공모점수를 부여하게 되었고, 결국 토지가격이 높아지면서 사업성이 낮아져 사업 좌초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주체인 공공과 신도시 지자체, 기업간의 연계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신도시에 특정 기업이 정착하는 과정이 법에 정해진 틀 안에서 투명하게 공개될 경우 전술한 특혜 시비는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된 ‘기업도시’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3기 신도시 개발 초기 시점에 자족기능용지의 최종 사용자인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신도시의 대기업
유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

최근 가계부채의 특성과 향후 과제

정 희 수 연구위원(heesoo_jung@hanafn.com)

최근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경제주체의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금융자산이나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보다 금융부채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특히 30대,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 가계부채는 증가속도가 문제이며 속도 조절과 함께 장기적으로 소득이나 자산 증가를 통한 부채상환 역량을 강화해 코로나19의 정상화 과정에서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요국 개별 경제주체의 보유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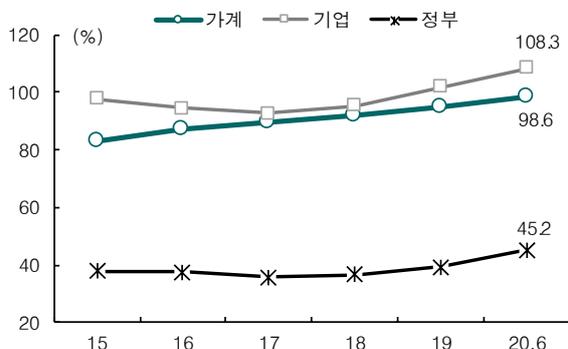
- 2020년 3월 전후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이 심화되면서 각국이 선제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을 확대한 결과 가계·기업·정부의 부채가 급격히 증가
- 다만 미국, 유로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계보다 기업이나 정부의 부채 증가속도가 빠르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미국의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년 상반기 동안 1.7%p 증가한 것에 반해, 기업부채와 정부부채 비율은 각각 7.8%p, 23.0%p 증가
- 이와 달리 국내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았으며 2020년 6월말 현재 GDP 대비 98.6%를 기록하는 등 우려감이 커지는 상황
 - 기업부채도 '18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여 명목GDP 대비 비율이 '20년 6월 108.3%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선진국 평균보다 9.5%p 높은 수준

■ 주요국 명목GDP 대비 부채 비율의 증감 (단위:%p)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19.2Q	20.2Q	19.2Q	20.2Q	19.2Q	20.2Q
한국	0.9	3.4	3.6	6.5	3.6	6.0
미국	-0.7	1.7	0.7	7.8	0.9	23.0
유로	0.1	2.6	0.6	7.4	3.0	12.3
영국	-1.4	3.7	-4.5	7.0	2.8	21.9
일본	0.3	2.6	0.4	10.9	4.4	13.0
중국	1.9	3.9	1.9	13.1	-	-
호주	-1.0	1.9	0.5	1.6	1.6	9.8

자료 : BIS

■ 국내의 가계, 기업, 정부부채 비율 (명목 GDP 대비)



자료 : B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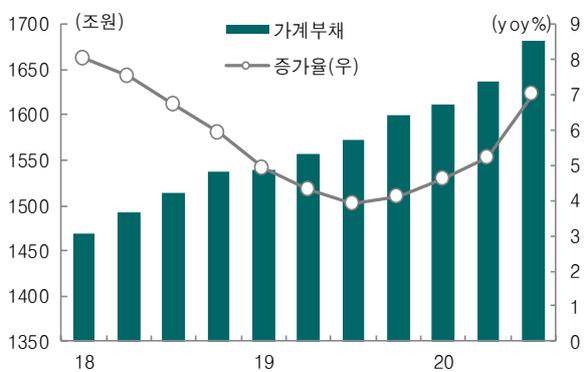
■ 최근 가계부채는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2019년 3/4분기부터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국내 가계부채는 2015~16년 10%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9년 3분기부터 상승세로 전환
 - 가계부채 증가율(yoy) : 8.1%('17) → 5.9%('18) → 4.1%('19) → 7.0%('20.9)
- 2020년 9월말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1,682조원으로 올해만 82조원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연간 증가 규모인 64조원을 크게 상회
 -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책지원 자금이 크게 확대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의 풀림현상이 심화된데 기인

■ 최근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0년 3월 현재 가계의 금융자산이 전년보다 축소된 가운데 금융부채의 증가세는 지속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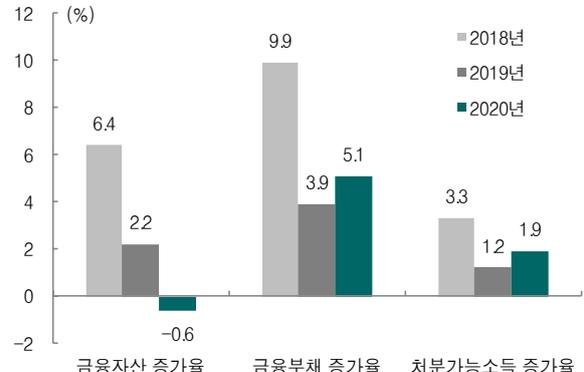
- 금융자산 증가율은 2019년 2.2%에서 2020년 -0.6%로 하락하고 금융부채 증가율은 3.9%에서 5.1%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 금융부채 구성 중 담보대출이 전년비 3.5% 증가한 가운데 신용대출과 카드론이 각각 10.5%, 22.7%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유도
- 이는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소폭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금리 하락과 주가 급락으로 금융자산 수익률이 크게 하락한 것에 기인
- 연령별 금융부채 증가율을 보면 30대에서 2019년 8.4%에서 2020년 12.3%로 상승폭이 컸고, 저소득층에서 2019년 -3.6%에서 2020년 19.9%로 크게 상승
 - 소득4분위 : 9.4%('19) → 2.4%('20), 소득5분위 : 4.3%('19) → 6.3%('20)

■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 가계 금융자산, 금융부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자료 : 통계청

[1]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매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이 일부 반영됨

- 또한, 자영업자보다 근로자의 금융부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자영업자 : 5.1%('19) → 5.9%('20), 근로자 : 4.8%('19) → 7.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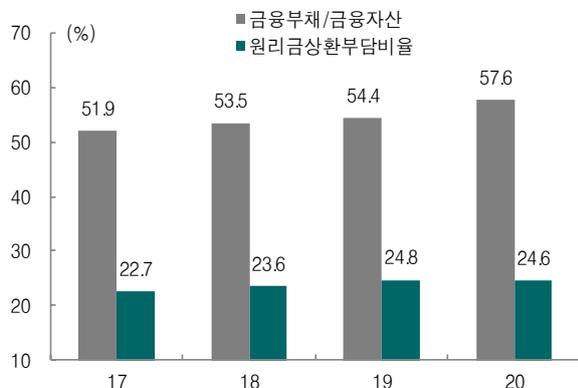
■ 가계의 재무건전성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완만하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임

-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은 2019년 54.4%에서 2020년 57.6%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실물자산의 증가율이 상승하면서 우려감이 다소 완화
 - 실물 자산 증가율 : 2.9%('19) → 4.3%('20)
- 가치분소득의 증가와 대출금리 하락으로 원리금상환부담비율은 2019년 24.8%에서 2020년 24.6%로 소폭 하락²⁾
- 향후 1년 후 부채규모가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 비중이 커지고 보유부채의 상환 가능성에 대해 기한 내 상환할 수 있다는 비중도 감소
 - 가계의 대출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상환여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

■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증가세가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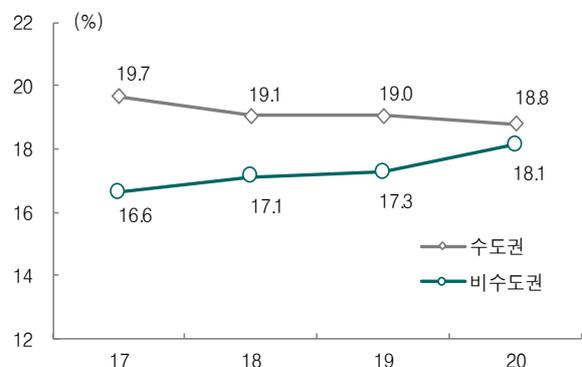
- 지방 경제의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해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
 - 수도권 : 19.0%('19) → 18.8%('20), 비수도권 : 17.3%('19) → 18.1%('20)
- 이는 비수도권의 자산증가율이 수도권보다 2년 연속 하회한 가운데 비수도권의 금융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것에 기인
 - 지역별 가계 자산 증가율(yoy) : 4.5%(수도권), 0.5%(비수도권)

■ 가계 원리금상환부담비율 및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



자료 : 통계청

■ 지역별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



자료 : 통계청

2) 원리금상환부담비율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으로 계산

■ 사상 최대의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주식 등 자산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가계부채는 새로운 위기의 뇌관으로 부상

- 자금수요가 주택담보대출에서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로, 차입을 통한 주식투자로의 쏠림현상이 확산되면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
- 부실로 이어질 경우 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악화되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
 - 다만,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21년 6월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리스크 이연을 통한 부실 가능성을 완화

■ 이에 정부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

- 은행권의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와 고액 신용대출 중심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단기적으로 가계부채의 급증을 억제하도록 유도
- 금융위는 내년 1/4분기까지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
 - 금융회사별 DSR 규제를 차주단위 DSR로 전환, 주담대 적용 중인 DTI 규제를 DSR로 대체, DSR 산정 방식의 합리화 등 적극적인 규제 도입을 검토

■ 가계부채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증가 속도의 조절을 통해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

- 코로나19 위기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유동성이 회수되는 시점까지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지역별 가계대출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비대칭적 쏠림현상을 억제해야 함
- 또한, 자금수요의 목적을 명확하게 적시함으로써 일단 받고 보자는 식의 대출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방안도 고려
 - 긴급 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고 쉽게 대출 받는 관행을 바꾸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을 병행
- 장기적으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늦추고 소득이나 자산 증가를 통한 부채상환 역량을 강화해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
 - 비정상적인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계의 기초 체력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 

코로나 이후 글로벌은행의 수익성

조재범 연구원(bum123123@hanafn.com)

코로나19로 글로벌은행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McKinsey는 글로벌 은행들이 겪을 두 단계에 걸친 추가 위기를 제시하며, ROE 회복에 최소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업 부문별로는 지급·결제 부문 수익률만이 유일하게 GDP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은행의 수익성 회복을 위한 비용절감, 리스크관리, 자본관리 등 단·중기 전략과 업무 방식 전환, Biz 모델 재구축, ESG 경영전략 등 수익성 회복 이후를 고려한 장기 전략을 제시했다.

■ McKinsey는 글로벌은행이 코로나19로 ROE가 회복되는데 최소 5년을 전망³⁾

- 코로나19로 글로벌은행의 수익성이 급락하는 추세이며, ROE는 2019년 8.9%에서 2021년 1.5%로 급격히 하락한 후, 2024년 8.6%로 5년에 걸친 회복 예상
-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글로벌은행은 신용 손실에 의한 대손충당금 증가, 수요 감소 및 제로금리 환경에 따른 수익 감소 등 두 단계에 걸친 위기가 있을 전망
 - (1단계) '21년에는 정부 지원과 은행 지원 프로그램이 만료되며 대손충당금이 증가하고, CET1(보통주 자본 비율)이 '19년 12.5%에서 '21년 10.9%로 하락
 - (2단계) '22년부터는 저금리 기조의 연장선에서 수요 감소에 따른 수익 감소가 전망되며, ROE가 회복되는 '24년까지 누적 수익 감소액은 3.7조 달러로 추정

■ 수익성 회복기간 동안 지급/결제를 제외한 다른 banking 부문은 수익 감소 및 유지 전망

- (리테일 금융) 개인 대출 금액은 소비 위축으로 감소할 전망이나 개인의 신용 위험 증가에 따른 추가 금리 부과로 총 수익은 유지될 전망
- (기업 금융) 정부 대출 프로그램 등으로 수익성이 유지되었으나, 신용 위험 상승으로 추가 공급은 제한적이며 저금리에 따른 금리 재조정 시 손실 발생 가능
- (지급·결제) 지급·결제 부문은 빠르게 디지털화가 진행되며 소비 형태 변화에 따른 급격한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나, 국경 간 결제 등의 부문은 감소
- (자산관리) 시장 변동으로 불확실성이 크고, 원격 자문 등 저비용 모델의 출현으로 수수료 인하 압력이 존재하나 타 금융 서비스와 통합 등 신수익 창출 기회 존재

³⁾ A test of resilience: Banking through the crisis, and beyond, McKinsey, 2020.12

- (자본시장·IB) 급증했던 수익은 낮은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자본과 부채의 발행이 적어지며, 위기로 인한 M&A는 지속될 전망이나 규모 면에서 축소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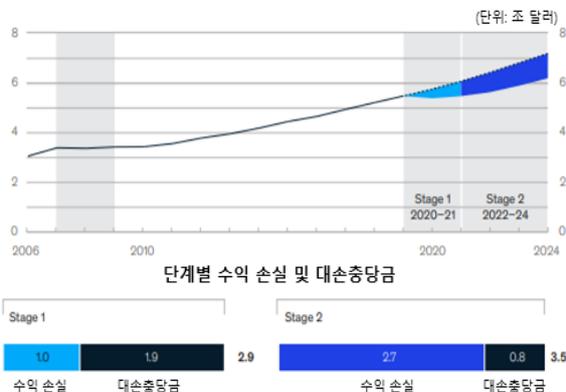
■ 은행 수익성 회복을 위한 비용절감, 리스크관리, 자본관리 등 전략 방안을 제시

- (비용절감) 디지털 전환, 직원 재배치, IT 인프라 전환, 지출 재조정, बैं킹 간소화, 원격 업무 강화 등 6개 비용절감 전략으로 약 30% 정도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
- (리스크관리) 연체 포트폴리오 위험 재평가, 디지털 고객 확보, 프론트 팀 교육 강화를 통한 고객 지원 효율성 개선과 포트폴리오 및 모델링 문제 해결이 필요
 - 포트폴리오 구성은 헬스케어, 유틸리티, 기술 등의 저위험 산업 비중 확보가 중요
- (자본관리) 자본관리는 많은 규칙과 예외 등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으로, 요구 자본 계산 규칙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면 2~7% 정도의 위험가중자산 감소가 가능

■ 은행은 수익성 회복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과 비즈니스도 고려한 전략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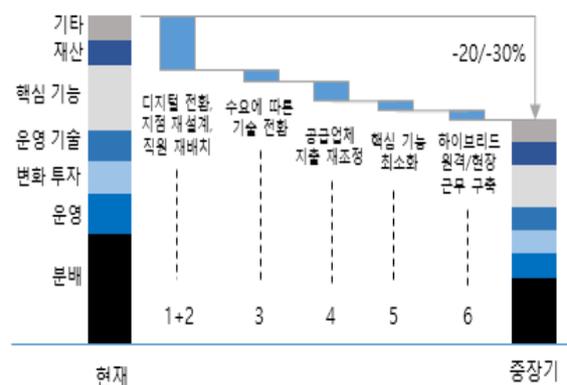
- (업무 방식) 의사 결정 과정 간소화, 고객 소통 확대, 데이터 분석 능력 강화, 원격 근무 환경 구축 등 업무 방식을 전환하여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대응 필요
- (Biz 모델) 저금리 환경과 핀테크의 진입은 은행의 주요 위협으로 저금리 대응, 수수료 기반 고객 중심 서비스, 핀테크 시장 진출 등 Biz 모델 재구축이 필요
 - 저금리 환경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관련 리스크 요소에 대한 손실가능 원천 분석, 수익대비 리스크 최적화, 내부이전가격(FTP) 시스템 변경 등이 존재
- (ESG) 기상 이변, 사회적 불평등 등의 문제가 중요해지며, ESG를 지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은행은 분명한 목적 설정을 통해 ESG 문제에 접근 필요 

■ 포스트코로나, 은행 ROE 회복과정 2단계



자료 : McKinsey

■ 6개 부문별 비용절감 효과



자료 : McKinsey

디지털위안화, 달리 패권 탈피 신호탄 되나

이 화 정 수석연구원(hj_lee89@hanafn.com)

중국인민은행이 2014년부터 추진해온 디지털위안화가 최근 온·오프라인 결제 테스트를 진행하며 상용화에 한 발짝 다가섰다. 디지털위안화는 효율적인 자금흐름 관리와 민간 결제회사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억제 효과 외에도 글로벌 디지털결제 시장에서의 유리한 기술적 고지 선점에 의미가 있다. 디지털위안화를 통한 위안화 영향력 확대를 경계한 주요국 중앙은행도 디지털화폐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대중 무역대금 및 송금 규모가 큰 국내은행들도 이러한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중국 디지털위안화(DCEP^[1])의 온·오프라인 결제가 현실화되며 상용화에 잔결음^[2]

- 11일 인민은행은 디지털위안화 2차 공개 테스트 지역인 쑤저우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위안화를 배포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닷컴에서 DCEP 결제를 허용
 - 인민은행은 추첨을 통해 선정한 쑤저우 시민 10만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위안화 2천만 위안(약 33.3억원)을 인당 200위안(3.3만원)씩 디지털 지갑 형식으로 배포
- 본 테스트는 10월 오프라인 결제만 허용했던 선전 시범구와는 달리 발행 규모도 늘어나고 온·오프라인 매장 모두 사용 가능한 점에서 진일보한 형태
 - 당시 인민은행은 선전 시민 5만명을 대상으로 1천만 위안 규모의 DCEP 시범업무를 진행했으며, 청두, 숭안특구, 북경동계올림픽 현장에서도 비공개 테스트를 시행

■ DCEP는 2014년부터 추진되었으며, 中은 세계 최초 법정 디지털화폐 출시국이 될 전망

- 인민은행은 효과적인 자금흐름 관리, 과도한 민간 결제회사 의존도 억제, 디지털화폐 시스템에서 위안화의 유리한 고지 선점 등을 목적으로 DCEP 발행을 추진
 - DCEP는 현금 대비 추적·통제가 용이해 탈세·돈세탁을 억제하고, 알리페이와 같은 민간기업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디지털화폐 기술에서 세계 표준 선점 등 효과
- 지난 10월 인민은행은 실물 위안화와 디지털위안화를 모두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은행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며 디지털위안화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
- DCEP는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우선적으로 발행하고 상업은행이 다시 이를 일반 대중에게 재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존 결제수단과 공존할 전망

[1]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디지털위안화의 공식 명칭으로, 2018년 인민은행이 발표

[2] "JD.com becomes first online platform to accept China's digital currency", Reuters, 2020.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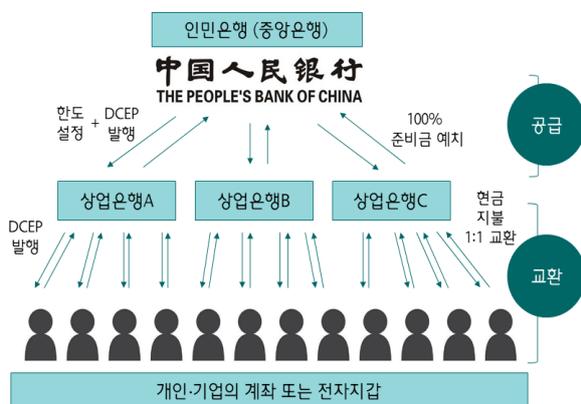
■ 중국이 디지털화폐 개발의 선두로 부상하며 DCEP 결제시스템을 대외로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주요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개발 움직임이 가속화

- 중국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디지털위안화 운용 범위를 대외로 확대해 美 달러 중심의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위안화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할 계획
- 일대일로와 같이 중국이 주도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국가간 DCEP 결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각국 중앙은행도 CBDC³⁾ 개발을 본격화
 - 전세계 66개국 중앙은행 가운데 80% 이상이 CBDC 연구·개발에 돌입⁴⁾
- 중국 금융시장의 폐쇄성 등으로 디지털위안화가 단기간 내 글로벌 결제 시스템 판도를 바꿀 가능성은 낮으나, 해외 건설 프로젝트, 주요 무역국과의 무역대금 결제, 해외 노동자 송금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주목

■ 대중 무역대금 결제, 송금 등에서의 DCEP 도입을 대비한 국내은행의 대비가 필요

- 대중교역 및 송금 규모가 큰 한국도 DCEP 결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은행도 새로운 결제시스템 등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
 - DCEP로 받은 무역대금을 원화로 환전시 국내은행과 DCEP간 시스템 불합치 등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 관련 IT 시스템 구축 및 법적 준비절차 등이 필요
- 향후 DCEP가 활성화될시 은행이 보유한 위안화 예금이 DCEP 형태로 이탈할 가능성에 유의하고, 이와 관련한 위안화 예금 유치·관리 방안도 고려할 필요
 - DCEP를 통한 위안화 보유 선호도가 높아질 경우 시중은행에서의 위안화 유출 가능성에 대비한 DCEP 예금 관리 시스템 등 새로운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 인민은행의 디지털위안화 이원화 운영체제



자료 : 중국인민은행 재편집

■ 국가별 디지털화폐 추진 현황

국가	추진 현황
미국	BIS 및 6개 중앙은행 주도의 디지털 통화 연구그룹 합류, 싱크탱크 '디지털 달러재단' 설립
EU	유럽중앙은행, '디지털유로' 발행 검토
스웨덴	연내 디지털화폐 'e-크로나' 시험을 완료하고 내년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
일본	일본은행, 2021년부터 '디지털엔화' 시범 운영 계획
한국	한국은행, 2021년 가상환경에서 디지털화폐 시험 유통 계획

자료 : 언론보도

[3]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법정 디지털화폐

[4] "Impending arrival - a sequel to the survey o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BIS, 2020.1.23

금리: 외국인 주도의 장세 지속 불가피

김 수 정 수석연구원(sjkim1771@hanafn.com)

미국 금리는 부양책 합의 가시화로 상승하고 유로지역 금리는 완화적 통화정책 영향으로 보합권에 머물렀다. 국내의 경우 연말 기관들의 거래량이 크지 않은 가운데, 외국인 국채 선물 매도로 국고3년은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1%선을 돌파하고 10년물의 경우 코로나19로 금융불안이 고조되던 시기의 수준으로 상승했다. 정부는 2021년 국고채 발행 계획을 통해 국고10년 발행 비중 축소를 예고했으나 단기적으로 외국인 주도의 채권 약세 지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미국 금리는 경기 부양책 기대로 상승, 유로지역은 완화적 통화정책 영향 속 보합권

- FOMC는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목표 달성이 상당히 진전될 때까지 자산을 매입할 것을 명시화하고 매입 규모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포워드가이던스를 강화
 - 경제전망에서는 성장률과 물가를 상향 조정하고 실업률도 하향 조정한 가운데, '23년 제로금리 종결(금리 인상 시작)을 전망한 위원이 1명 증가(17명 중 4명→5명)
- ECB 회의에서는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PEPP) 증액 및 기간 연장, TLTRO III 기한 연장, 긴급장기대출프로그램(PELTROs) 도입 계획 등의 추가 정책을 발표
 - 다만 총재는 경제와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PEPP 기간 단축 등이 가능하다고 언급
- 미국 국채 금리의 경우 경기 부양책 논의 진전과 백신 개발 기대로 상승했으나, 유로지역 금리는 노딜 브렉시트 우려와 ECB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하락
 - 국채 10년 금리(11월말→12.17일, %): 美 0.84→0.94, 獨 -0.57→-0.57 英 0.31→0.29

■ 외국인 국채 선물 매도로 국고 3년 금리는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1%를 돌파

-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수출 대기업 중심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반면, 고용 유발이 큰 대면서비스업, 건설업 회복이 지연되는데 따른 만성적 고용부진 우려를 제기
 - 고용안정 목표 추가와 관련해서는 인구구조 변화 가속화와 정부정책으로 실업률이 노동시장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목표 설정과 달성이 어려울 수 있음을 지적
- 한은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물가안정목표제를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연준을 제외한 중앙은행들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점을 감안한 결정
- 국고 금리는 외국인 10년 선물 순매도로 10년과 3년 금리차가 70bp 이상 벌어지는 등 장기물 중심의 상승(국고 3/10년(%): 11월말 0.98/1.66→12.17일 1.00/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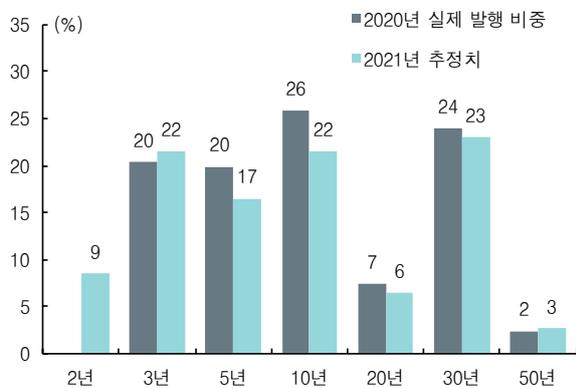
■ 2021년 국고2년 발행 신설에 따른 발행 감소는 10년물이 가장 클 듯

- 2021년 국고채 발행계획에 따르면 신규 발행하게 될 국고2년물은 8~9% 비중, 20년물 이상은 보험사 장기채 수요를 감안해 32~33% 수준으로 발행한다고 발표
 - '20년 발행 계획은 국고3~5년 40±5%, 국고10년 25±5%, 20년 이상 35±5%이었던 반면에 '21년은 국고2~3년 30±5%, 5~10년 40±5%, 20년 이상 30±5%로 변화
- 한편 5~20년물 발행의 경우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 발표함에 따라 국고2년 구간 신설로 인한 발행 감소는 5년과 10년물이 가장 클 것으로 파악
 - 50년물은 올해와 유사한 연 4~5조원 발행한다고 발표
- 이는 단기채의 견조한 수요와 10년물의 뚜렷한 매수 주체 부재를 고려한 발행 비중 조절로 특히 올해 한은은 수급을 감안해 10년물 중심으로 직매입을 진행해옴
 - '20년 중 국고 10년물 순매수 상위 거래자는 외국인 다음으로 한은(올해 10.5조원 국채 직매입 중 7.5조원을 10년물 매수)이 차지
- 단기채 발행 비중을 확대함에 따라 향후 정부 이자 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장단기 스프레드 확대가 계속되는데 따른 부담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

■ 연말 국내 기관들의 복클로징 속에 외국인 선물 거래에 의존한 장세 이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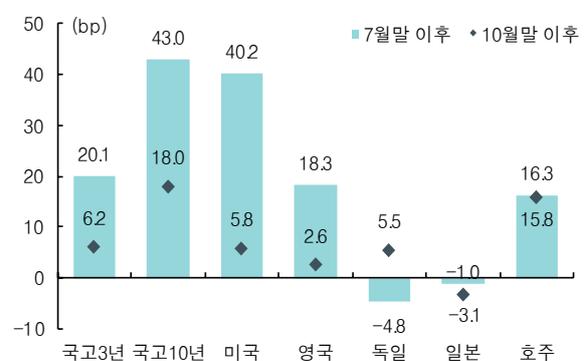
- 연말 기관들의 포지션 일단락에 따른 거래량 감소와 10년물 저가 매수세 유입 부족 등으로 외국인 선물 매도로 인한 장기채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유의
- 한편 최근 국내 장기금리 상승이 주요국 대비 가파르게 진행된 점과 향후 국고10년 물 발행 비중 축소 등을 감안할 때 기관들의 매수가 재개될 경우 장단기 금리차 축소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0.90%~1.05%, 1.65%~1.85% 범위로 전망 

■ 국고채 기물별 발행 비중 변화 예상



주 : 2021년 추정치는 기획재정부 발표를 토대로 연구소 추정
 자료 : 기획재정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주요국 국채 10년 금리 등락폭



주 : 12.17일 기준
 자료 : Bondweb

외환: 2021년 외화자금시장 수급 개선 기대

윤 지 선 연구원(jisun.yun@hanafn.com)

올해 9월초까지 1,180원에서 강한 지지선을 형성하던 원/달러 환율은 이후 3개월간 약 100원의 가파른 하락을 시현하였다. 이후 저점 인식 및 연말을 앞둔 외화자금시장 수급 악화로 원/달러 환율은 재차 1,100원 가까이 반등하였다. 한편 달러인덱스는 백신 개발 및 추가부양책 기대가 위험선호를 자극하며 달러인덱스 기준 90pt를 하회하였다. 연말 타이트한 수급 환경, 역외 스포지션 차익실현 수요, 약달러 속도조절 속에 원/달러 환율은 1,100원을 중심으로 등락할 전망이다.

■ 약달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경계 및 수급 부담 속에 원/달러 환율은 1,090원대로 반등

- 원/달러 환율은 약달러 지속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반등 및 타이트해진 연말 글로벌 외화자금 시장 수급 여건, 외국인 주식 순매도 전환으로 1,090원대로 반등
 - 연말 달러 자금 수요 증가로 1년 이하 전구간 스왑포인트는 (-)로 반락
- 그러나 12월 수출(~10일, 일평균 +11.9%)이 호조를 보이고 추가 선박 수주(한국조선해양 1조원 등) 소식이 지속되는 점은 원/달러 환율 상승을 제한
- 한편 \$600억 규모의 통화스왑은 내년 9월말까지로 만기를 6개월 연장하기로 발표. 코로나 불확실성 지속에도 불구하고 외화자금시장 안정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코로나 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위험선호 분위기 지속 속에 달러화 약세 지속

- 달러화는 美 코로나 심화 및 일부 주(州)들의 경제봉쇄조치 강화 소식에도 불구하고 백신 개발 및 \$9천억 규모의 부양책 타결 기대가 위험선호를 강화하며 달러인덱스 기준 90pt대를 하회, 2년 반래 최저치를 기록
 - 한편 재무부는 12.16일 환율보고서를 통해 베트남과 스위스를 관찰조작국으로 지정. 한국과 중국은 관찰대상국이 유지되었으며, 대만, 태국, 인도를 신규 추가
- 유로화는 유럽 내 경제 봉쇄조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선반영된 ECB회의 결과, 브렉시트 협상 기한 연장 소식으로 달러당 1.22유로대로 상승
- 위안화는 11월 수출(YoY +21%)이 호조를 보였으나, 인민은행의 추가 유동성 공급 및 미국의 중국기업 제재 소식으로 달러당 6.5위안에서 지지를 보임
 - 12.15일 인민은행은 연말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해 1년물 MLF로 9,500위안 유동성을 공급. 12월 만기 6,000억 위안 고려시 시장 순공급 유동성은 3,500억 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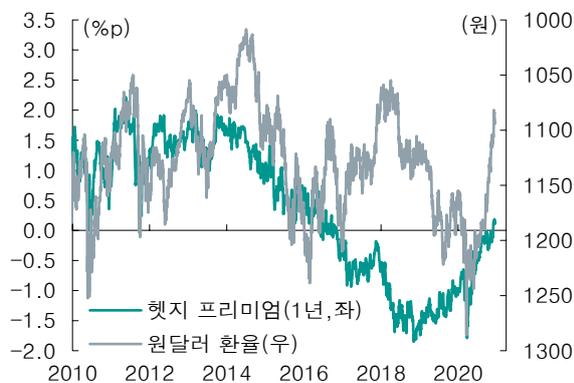
■ 내년 외화자금시장 수급 환경은 내외 금리차 확대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

-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역전을 선반영하며 2016년부터 스왑포인트는 (-)권으로 진입. 이후 (-)폭 확대를 지속하며 올 초 코로나 사태로 -100bp까지 역전(1년물)
- 그러나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 통화스왑 등 美 정책당국의 적극적 달러 유동성 공급, 국내 기관들의 자산스왑 수요가 줄어들면서 스왑포인트는 (+)로 전환
 - 최근 스왑포인트가 (-)로 반락한 것은 연말을 앞둔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
- 향후에도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추가로 확대되고, 美 정책당국의 통화 및 재정 경로를 통한 달러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면서 스왑포인트 확대는 지속될 전망
 - 1년 선도금리에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약 85bp로 현재 기준금리 격차(25bp) 대비 60bp 높은 상황에 있어 향후 스왑포인트 확대 압력으로 작용
- 다만 미국채 금리 상승 및 환 헷지 환경 개선에 따른 국내 기관들의 해외 채권 투자 증가는 자산스왑 수요를 확대시켜 스왑포인트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
 - 올해 보험사 등 기관들의 해외 유가증권 순투자 규모는 약 1.8조원으로 직전 5년 평균(18.7조원) 대비 큰 폭 감소

■ 약달러 환경에도 불구하고 타이트한 연말 외화자금 시장 수급으로 1,100원 중심 등락 전망

- 달러인덱스 기준 120개월 이평선(89.7pt)을 하향 돌파한 상황에서 백신 승인 및 추가 부양책 이슈와 맞물려 모멘텀이 지속되겠으나 하락 폭은 제한될 전망
- 약달러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연말을 앞둔 외국인 차익실현 움직임, 환율 하단에 대한 인식 속 공격적 숏플레이 제한이 나타나며 1,100원 중심 등락 전망
 - 다만 중국 기업 제재에 따른 MSCI EM지수 변경에 따른 한국 비중 확대(+0.06%p)가 내년 초(1.5일) 반영되면서 외국인 주식자금 유입은 재개될 것으로 예상 

■ 원달러 환율과 환헷지 프리미엄 추이



주 : 헷지 프리미엄은 12M 선물환을 기준으로 계산한 스왑레이트
 자료 : Bloomberg

■ 선도금리에 반영된 한-미 기준금리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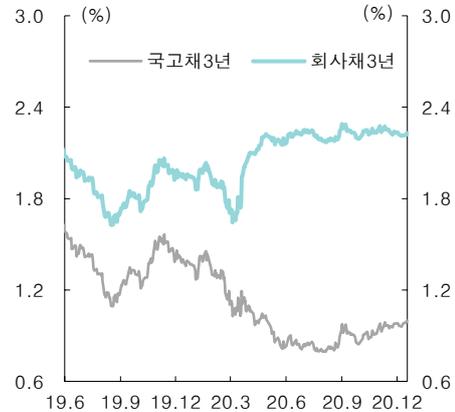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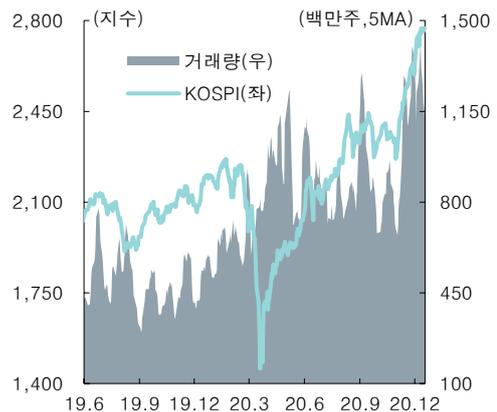
금리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18년말	1.82	1.93	1.95	2.29	1.82	1.88
'19년말	1.39	1.53	1.49	1.94	1.36	1.48
10월말	0.52	0.63	0.85	2.25	0.94	1.24
12월 11일	0.50	0.66	0.88	2.22	0.98	1.31
12월 14일	0.50	0.66	0.88	2.22	0.99	1.31
12월 15일	0.49	0.66	0.88	2.22	0.98	1.32
12월 16일	0.49	0.66	0.88	2.22	0.99	1.34
12월 17일	0.48	0.66	0.89	2.23	1.00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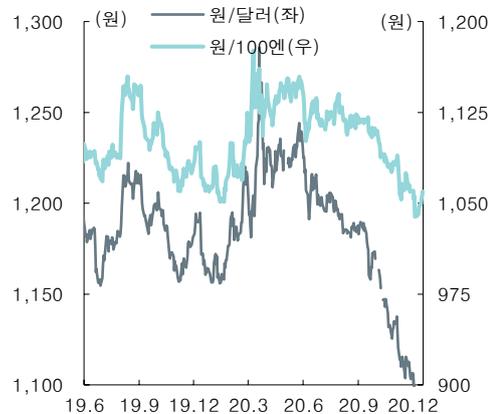
주가

	KOSPI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18년말	2,041.0	41,207	353	2,026
'19년말	2,197.7	41,136	416	-3,404
10월말	2,267.2	117,821	796	-9,825
12월 11일	2,770.1	183,291	1,215	-1,540
12월 14일	2,762.2	170,123	1,114	-3,670
12월 15일	2,756.8	155,380	1,094	-3,724
12월 16일	2,771.8	136,497	1,167	932
12월 17일	2,770.4	162,753	1,015	-2,587



환율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18년말	1,115.9	1,012.4	162.3	1,276.6
'19년말	1,156.4	1,064.2	166.0	1,297.1
10월말	1,135.1	1,084.3	169.4	1,321.9
12월 11일	1,090.3	1,047.6	166.5	1,321.2
12월 14일	1,091.8	1,049.4	166.6	1,326.2
12월 15일	1,093.3	1,054.8	167.2	1,329.5
12월 16일	1,094.0	1,056.9	167.4	1,332.8
12월 17일	1,093.3	1,059.6	167.3	1,34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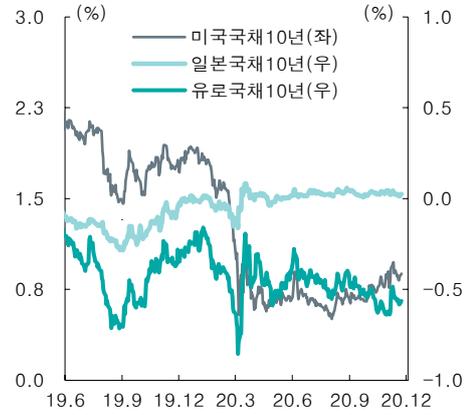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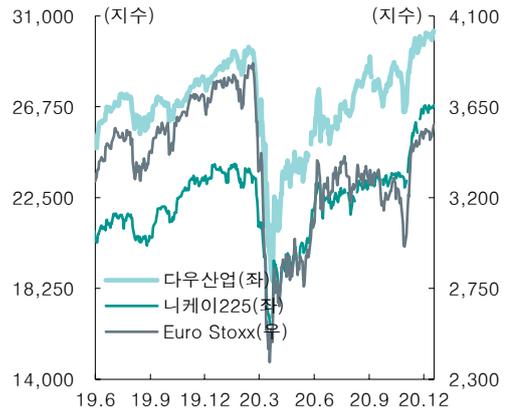
금리

	미국				일본	유로
	FFR	리보(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18년말	2.40	2.808	2.49	2.68	0.00	0.24
'19년말	1.55	1.91	1.57	1.92	-0.01	-0.19
10월말	0.09	0.22	0.15	0.87	0.04	-0.63
12월 11일	0.09	0.22	0.12	0.90	0.01	-0.64
12월 14일	0.09	0.22	0.12	0.89	0.01	-0.62
12월 15일	0.09	0.23	0.11	0.91	0.01	-0.61
12월 16일	0.09	0.24	0.12	0.92	0.01	-0.57
12월 17일	0.09	0.24	0.12	0.93	0.01	-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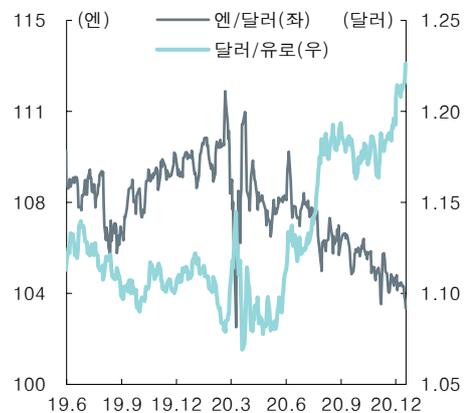
주가

	다우산업	니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18년말	23,327.5	20,014.8	2,493.9	3,001.4
'19년말	28,538.4	23,656.6	3,050.1	3,745.2
10월말	26,501.6	22,977.1	3,224.5	2,958.2
12월 11일	30,046.4	26,652.5	3,347.2	3,485.8
12월 14일	29,861.6	26,732.4	3,369.1	3,504.0
12월 15일	30,199.3	26,687.8	3,367.2	3,521.5
12월 16일	30,154.5	26,757.4	3,367.0	3,543.0
12월 17일	30,303.4	26,806.7	3,404.9	3,560.9



환율/상품

	환율		상품	
	엔/달러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18년말	109.61	1.146	52.9	1,281.3
'19년말	108.66	1.122	67.3	1,523.1
10월말	104.60	1.165	37.2	1,879.9
12월 11일	104.04	1.212	50.5	1,843.6
12월 14일	104.03	1.215	50.7	1,832.1
12월 15일	103.62	1.216	50.2	1,855.3
12월 16일	103.47	1.218	50.9	1,859.1
12월 17일	103.14	1.226	51.5	1,890.4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0권 26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0년 12월 19일 인쇄

2020년 12월 21일 발행

발행인 지성규

편집인 곽영훈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www.hanaif.re.kr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0권 26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Fax 2002-2610